

종 합 토 론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지금부터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에 대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과 지정토론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정 탁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전쟁과 언론보도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남전은 미국 언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언론보도는 철저히 애국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월남전 이후 ‘국가의 이익’과 ‘전쟁의 승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언론의 애국보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진보지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하여 상충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국방부의 전쟁 기밀문서를 보도한 것에 대해 뉴욕 대법원이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전쟁 특파원 역사에서 월남전 보도는 그 자체가 애국보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이익을 바라봄에 있어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불일치하게 된다면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방과 후방의 의견 일치입니다. 전·후방의 의견이 다를 경우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맥이 빠지고 전쟁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인, 군인, 특히 군 홍보담당자가 전쟁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전쟁을 수행할 경우 반작용이 클 것을 예상하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내 여론이든 국제 여론이든 많은 시간을 들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극한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정당성

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인부터 군 홍보담당자들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 홍보 시스템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군 당국이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국가 위기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정 명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주제 발표하신 발제문에서 미국은 베트남전의 패배의 요인으로 언론의 영향을 꼽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써 미국 정부와 군, 언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선제공격을 근거로 미국이 핵 함모, 구축함, 전투함, 함정 등으로 구성된 핵 함모 전단을 통킹만에 투입해 베트남을 초토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를 빌미로 월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뉴욕타임즈가 군사계획 전문을 입수하여 사전에 보도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펜타곤 페이퍼 사건) 당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될 것이라며 통킹만 침공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킹만 침공계획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기밀문서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언론과 군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미군 당국은 Inner Circle(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NBC, CBS, PBS 등 미국 주요 6개 언론사)에 대하여 중요한 군사 계획이 있기 전 출입기자를 극비리에 불러서 설명을 하며 엠바고를 걸고는 하였으나 통킹만 침범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침공사건입니다. 전 세계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6일 만에 이집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 신문사는 사전에 침공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두 신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

니다. 오늘 토론에서 언론이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상황에서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이정명 위원께서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의 쟁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김 철 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발제자)**

펜타곤 페이퍼 사건은 국가 안보의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의해 볼만한 사례입니다. 이익비교형량의 법칙에 의해 극비리의 군사 기밀을 보도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기밀의 판단기준으로 형식비, 실질비, 비공지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상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군사기밀을 극비리에 입수해 공개여부를 고민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으나,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 이후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언론계와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오 풍 연 (파이낸셜 뉴스 논설위원)**

우리 언론계에서는 보통 선임기자가 데스크를 마치고 보직을 맡기에 마땅치 않을 때 군사전문기자, 행정전문기자 등 전문기자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임명할 때 회사 편의에서 하지 말고, 출입처에 인원을 좀 더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출입기자가 최대 8진까지 있지만 국방부는 한 두 명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국방부 출입기자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국방부에서 사주를 만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방전문기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출입한 기자에게 전문기자 자격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 진 우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계획담당)

현재 국방부 등 각 군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열린 마음으로 언론을 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이 아닌 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 언론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예를 들자면, 국방부는 매일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리핑할 내용이 없을지라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입기자들이 군 공보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가치, 국익, 군사 작전, 기밀 보호 등을 고려하다 보니 제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안보 위기시의 취재 준칙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언론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하여 군과 언론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지휘관, 장교, 특히 공보 장교들이 언론을 이해하고 언론을 통해 군사작전, 평상시의 공보 작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edia Training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기계획으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원에서 언론의 입장과 군사적 관점을 수용하여 국가이익을 위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군 공보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등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SBS 논설위원실장)

제가 강릉 잠수함 사건, 이라크 전쟁, 레바논 전쟁을 직접 취재하면서 겪은 외국과 한국의 군사 공보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의 경험 중에 이스라엘이 취재에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취재하러 왔다고 하니 가장 먼저 공보실로 안내해 프레스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카드가 있으면 최전방이 아닌 이상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 시 언론보도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가기 전에 암만에서부터 프레스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취재해야겠다는 조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릉 잠수함 사건 때에는 취재기자가 30명이었는데도 현지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은 그 전날 이미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정보를 찾아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군 기밀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군사 기밀 논쟁은 또 다시 심해졌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취재에 제한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제한은 프레스 카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릉 잠수함 사건처럼 젊은 기자들이 용기와 무모한 배짱으로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에서 취재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군에서 취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김 인 철 (서울신문 심의위원)

6.25전쟁 이후 첫 교전은 2000년 연평해전일 것입니다. 당시 저는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첫 교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방부 브리핑이 아니라 현장 기자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언제쯤 발표가 이뤄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리핑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남북은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회사에서는 경찰 출입 1~2년차의 기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아침 9시쯤 취재기자로부터 '총소리가 들립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표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는데 아직도 대변인실은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보도는 아니더라도 방송 자막으로 교전 사실을 내보내도 될 것 같다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13년 전이 이러한데 지금이라고 적시에 대변인실에서 팩트를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일일브리핑은 제가 있을 때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해도 그것을 기사로 쓰는 기자는 드물 것입니다. 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과 언론이 보도하고자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확실하게 팩트를 알릴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 군 공보장교들이 많이 오셔서 언론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의 상식과 일반 사회의 상식이 일치되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국가위기상황에서 언론보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군 시스템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군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 흥 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관)

언론과 국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국가안보가 언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강릉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합참공보실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제도나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 국방부에서는 오픈되고 투명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언론은 동반자 관계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말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 제도, 규범,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언론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갖고 제도화된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먼저 논설위원, 언론사 대표가 군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설화·전문화된 협의체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 사건 때 국방부는 군사 작전이 언론을 통해 다 누출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에 보도준칙을 만들어 군과 언론이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준칙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계와 국방부에서 규정을 구체화·세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언론계에서도 국방 관련 보도인력을 양성하고, 보도 안내서, 윤리 강령 등을 교육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김 대 영 (연합뉴스 논설위원)

가끔 언론에 군사기밀로 보이는, 북한이 알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정도의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언론에 군사 기밀을 왜 보도했냐는 식의 불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군사정보를 기자만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서 군사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빨리 이 사실을 파악하고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지,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진 우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계획담당)

팩트인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산하 조직도까지 보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의 질의 자료로부터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긴급히 출입기자, 각 언론사, 국회 기자실까지 연락을 취해 군사기밀 누출의 우려가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국방부 출입 기자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기사를 막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 관료들은 오히려 공보담당 장교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보안 담당부서 등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조사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공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많았습니다. 국방부 공보장교들은 근무조를 편성해 합동참모본부 통제실에서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이 되면 즉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두 달이나 대기상태를 지속하며, 미사일 발사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출입기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저희에게도 어려움입니다. 교육하고 이해를 시켜 놓으면 곧 다른 기자로 바뀝니다. 전문기자제도가 만들어져 보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국민들에게 보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방 형 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통 언론 시대와 SNS 시대의 군과 언론의 관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만이 팩트를 보도했으나 지금은 개인도 SNS를 통해 사실 관계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 시대에는 팩트에 대한 보도 보다 팩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의 진실여부는 언론의 자체적인 검증과 군의 발표에 의해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같은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팩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계속해서 쌓이면 편향된 정보가 제공되어 오히려 팩트 그 자체보다 더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올바른 해석을 위한 관점이며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군과 언론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SNS 시대에 군과 언론의 관계는 달라져야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정 충 신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문기자 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 그나마 언론에서 전문성이 가장 많이 유지되는 곳이 국방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군만큼 전문적인 홍보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 천안함 사태인데, 이 사건으로 군과 언론 모두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양 기관은 가장 전문성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국민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본질

적인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당시 천안함 사태에서 언론보도의 혼란은 군 수뇌부가 판단을 하지 못해 홍보의 전략적 오류와 모순이 생겼고 이로 인해 언론대응의 타이밍을 놓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변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의 책임자들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대해 워낙 군 장성들이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시스템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례만으로도 충분한 교육 자료가 될 텐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3년 전의 미흡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안함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당시 왜 유언비어가 형성되었는지,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서 전략적인 홍보 전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토론과 연구논문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계, 언론계,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홍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언론과 군이 각자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자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발제자의 답변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 김 철 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발제자)

군과 언론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갖고,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과 언론 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로서 영국의 국가언론협력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이루어나가는 언론국방홍보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소통의 위기’라고 합니다. 소통이 불통되면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과 언론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성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발제자께서 미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답게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 제일의 수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군과 언론이 윈-윈하는 미국의 성공적인 언론관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언론과 정부는 국가위기시에 모두 국익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국민인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전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국익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무엇이 비밀인가가 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군은 비밀이라고 하지만 언론은 비밀이 아니라고 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밀 도장이 찍혔

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밀이란 상대가 알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 입니다. 상대가 알아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비밀이 아니겠지요. 또한 상대가 알게 되어도 아군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으면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조만간 공개될 내용은 비밀이라 보기 힘듭니다. 만일 오늘 비밀이라고 했으나 내일 다 공개된다면 당국의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의 이용 가능성, 우리의 피해 가능성,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군과 언론 간의 갈등이 보다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현채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영국군의 포탄의 진실에 대해 보도한 사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국군에 피해를 입혔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미라이 학살 사건도 미군이 공개를 막았으나 이후 언론에 보도가 되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반전 여론이 일어나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미군이 손해를 봤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전을 종결하고 미국이 인권의 옹호를 지지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언론보도는 단기적으로는 국익을 해칠지 모르나 장기적·전략적으로는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독재 국가들의 경우라면 언론보도가 더 높은 국가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익이라는 문제는 단기적·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비밀이라는 것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와 언론이 각기 할 수 있는 역할, 국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이상으로 2013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제자 김철우 위원님, 지정토론자 박현채 위원님, 송종길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